

FTA 등 통상조약 피해기업에 '연 2%' 용자·맞춤 컨설팅 지원

산업부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컨설팅 시설자금 용자 비중 15% 대폭 확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2%의 고정금리로 용자를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용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용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인공지능)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용자 비중을 기존 7%에서 15%로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2008년~2025년간 자금 유형별 지원 비율은 운전자금(93%)이 대부분이었고, 시설자금은 7%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4월 6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전문가(관세사)의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영향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는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진공 통상변화대응 사업전환팀이나 전국 34개 지역 본·지부를 통해 상담이나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산업인력공, '도제도약지구' 약정 체결

고교 단계부터 취업·지역정주 연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위드스페이스에서 '도제도약지구' 운영을 위한 약정을 시·도 교육청 및 도제도약스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제도약지구는 일학습병행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인재양성 모델로, 이번 약정은 공단과 시·도 교육청, 도제도약스쿨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고교 단계부터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약정 체결에 이어 2026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도 열렸으며,

공단 지부·지사를 비롯해 참여 학교, 시·도 교육청,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경북은 스마트제조와 관광산업 ▲인천은 첨단 뿌리산업 ▲충남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국방 분야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양성 및 후학습 강화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석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도제도약지구는 지역과 교육,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인재양성 모델"이라며 "공단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고교 단계부터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3대 다변화로 민간 해외진출 견인

어촌·안전 등 사업 영역 대폭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외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에 발맞춰 '3대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를 발판으로 국제농업협력(ODA)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3대 다변화 전략은 ▲사업영역 다각화 ▲추진방식 다양화 ▲지원체계 다변화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위험을 낮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사업 영역을 기존 농업기반시설 위주에서 어촌, 환경, 안전관리, 공간정보 등으로 대폭 넓혔다. 라오스와 인도네시아의 '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키리바시 '어촌 개발사업', 라오스 '디지털 농지정보 구축'이 대표적이다.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농업기반시설 외 분야를 다루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민간의 수요와 강점을 결합해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첨단 농업 단지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민간기업 수요를 연계했다. 필리핀에서는 국내 농기계 기업과 함께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농기계 단지 조성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 발굴·기획부터 민간 수요를 접목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제농업협력 추진 효율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공사는 자금 지원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 현장 중심형 사업관리, 현지 정보 및 협력망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통해 국산 농기자재를 해외에 직접 도입하고 있다. 한국형 국제농업협력사업인 'K-라이스벨트'에 농기계, 농약 등 국산 농기자재를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진출 초기부터 현지 정착까지 공사가 전 과정을 함께하면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위험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한전, 춘천에 'ZEB 1등급' 사옥 짓는다

(제로에너지빌딩)

국내 업무시설 가운데 최초 건축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달성 목표

한국전력이 국내 최초로 대형 업무시설 제로에너지빌딩(ZEB) 1등급 사옥 건설에 나선다.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달성하는 대규모 공공 업무시설 사례로, 향후 에너지 신기술 실증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한전은 강원본부 사옥을 공공·민간 최초로 연면적 1만5000㎡ 이상 국내 업무시설 가운데 최초로 제로에너지빌딩(ZEB) 1등급 건물로 신축한다고 6일 밝혔다.

신축 사옥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연면적 1만6471㎡ 규모로 건립된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당초 ZEB 3등급 예비인증을 받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K-RE100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등급으로 상향했다.

ZEB 1등급은 건물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의미하는 최고 등급이다. 대형 업무시설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많



한국전력 강원본부 신축사옥 예상 조감도.

/한전

아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업무시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은 약 1500건에 달하지만, 연면적 1만5000㎡ 이상 대형 업무시설 가운데 ZEB 1등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달성을 위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대거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BIPV)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수소연료전지 등을 시범 도입해 건물 자체를 에너지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또한 향후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를 가변형 모

듈 구조로 설계해 공간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초기 투자 부담과 인프라 부족으로 민간 참여가 어려운 분야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개척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강원본부 신축 사옥의 ZEB 1등급 추진은 공공기관이 정부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상징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 제로에너지빌딩 건설을 확대하고 에너지 신기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66개소에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재정 지원 외 현장 지원 코칭도 병행

노사발전재단은 일터 내 다양한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1차 지원대상 66개소를 선정해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완·개편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 재정 지원 외에도 현장 지

원 코칭을 병행하고, 개별 사업장 중심에서 지역·업종 단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재단은 1차 모집 기간 동안 접수된 개별 사업장 노사, 사업장 단체, 노사단체 등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총 66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전문가 현장 코칭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 수행계획 구체화 과정을 거쳐 협정 체결

을 진행하고, 실무자 워크숍과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1차 모집에 이어 2차 모집도 진행 중이다. 재단의 5개 권역별 노사상생센터를 통해 4월 중 지역 특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2차 모집은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스마트 해운물류산업 인재 육성

울산항만공과 지원 프로그램 가동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가 '스마트 해운물류산업 선도 융합인재 및 창업기업' 양성을 위한 2026년도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0년부터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해운물류 분야 접목을 위해 ▲융합인재 양성 ▲단계별 창업지원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발맞춰 인공 지능(AI)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멘토링 사업과 인공지능(AI) 해운물류 공모전을 통해 현장형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 멘토링 사업은 ICT·AI 전문가와 취업 준비생이 팀을 이뤄 약 5개월간 해운물류 문제 해결형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수팀에는 해수

부 장관상과 울산항만공사 사장상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내달 6일까지다.

아울러 AI 해운물류 공모전이 'AI를 활용한 울산항 운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오는 7월 개최될 예정이다.

창업 지원도 단계별로 확대된다. ▲예비 창업자 발굴을 위한 '창업오디션'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니-콘텐츠'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오픈노베이션' 등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선정된 예비 창업자와 기업에는 1000만~4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울산항 기반 기술 실증 기회 등이 제공된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시험에는 AI 기초지식 검증 과목이 도입된다. 학습 지원을 위한 표준 교재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